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최경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4대 사회악(惡) 특집호-

권두언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무

4대 사회악 특 집

·여성대상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학신

·청소년범죄의 발달궤적분석과 자기통제이론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이완희

·가정폭력 대응, 지금 현장에서는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순경 진세라

·식품안전을 위한 “경찰의 약속”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치안연구

·서울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노성훈

치안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실종수사

화성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위 정일수

치안동향

·최근 북한의 전쟁위협공세의 배경과 대응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유동열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자동인식시스템 전문가조사단 활동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남선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주요 언론 보도

·연구소 소개 및 부서별 업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경찰연구학회장) 이 창 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안전’이다. 국가란 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소 국가론(minimal state)을 주장하는 로버트 노직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도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 안전에서 찾는다.

새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다. 단순히 앞 뒤 단어 바꾼 게 무슨 큰 의미냐고 깎아내릴 수도 있겠다.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성(姓)과 이름을 바꿔 쓰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듯이 단어의 순서는 중요하다. ‘안전’을 앞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국민 안전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새 정부는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다짐했다. 이들 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4대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만큼은 대부분 공감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때만 되면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생치안 강화’와 같이 뭉뚱그려 놓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4가지 척결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한다.

때문에 시작은 좋아 보인다. 그런데 원인 진단을 비롯하여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정부

수립이후 민생치안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그렇지만 범죄문제가 시원스레 해결된 적 또한 없다. 이유야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부 가릴 것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대책만을 선호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짧은 임기 동안 빛이 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다니니까, 효과가 10년 뒤 어찌면 그 이상 걸리는 대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당장, 아니면 몇 달 내 뭔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대책을 찾게 마련이다. 그러나 몸에 열이 난다고 얼음 수건만 대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왜 열이 나는지 그 이유를 찾아 원인에 대한 치유가 이뤄져야 한다. 청결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 몇 마리 잡는다고 바퀴벌레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열이 날 때 얼음 수건을 대고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를 잡아 하듯이 범죄의 단기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지만, 범죄란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쉽게 풀릴 문제였다면 이미 오래 전에 풀렸을 테고, 경찰서나 교도소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사회란 게 생긴 이래 범죄는 단 하루도 사람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정들쳐지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까 두려워하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그래서 범죄문제는 남북통일이나 달 여행보다 어렵다. 남북은 언젠가 통일되겠고 달도 시간이 지나면 여행갈 날이 오겠지만 범죄는 인류가 남아있는 한 사라질 리가 없다.

왜? 범죄는 인간 본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강한 욕망의 굴레에서 범죄는 발생한다. 법과 제도로 이러한 욕망을 다 풀어줄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겁을 세계 주는 방법은 단기적 처방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이 급한데 겁준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까. 잠깐 참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수백, 수천 년 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겁을 세계 줬다. 여차하면 목을 날렸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범죄자들에게 미래 가치는 높지 않다. 범죄를 저질러 생기는 가치는 당장 지금이고 처벌은 훗날 얘기다. 그것도 잡힌다는 가정에서 말이다. 사람을 죽이면 극형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살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살인이나 성폭행 모두 잡히면 크게 혼난다는 것을 알고도 저지른다. 순간의 흥분과 충동이 미래 처벌의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겁만 세계 준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범죄는 사회문제의 부산물이다. 뭔가 탈이 났으니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는 크게 줄어들 수 없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자식을 굶겨 죽이는 부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 일변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과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 같은 법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 범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별 건 대낮에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는 판국이고,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차량을 질주하는 세상인데 공권력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어렵없는 얘기다. 단순히 전자발찌

채우고, 경찰 인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 범죄 문제가 심각한 게 기술이 부족하고, 미국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범죄 성향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도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경찰이다.” 경찰이 물고기라면 국민은 물이다. 물을 떠나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학교, 보안업체가 경찰 등 공권력과 함께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협력치안’이고 ‘융합치안’이다. 흔히 말하는 ‘치안 거버넌스’이기도 하다. 뭐가 됐든, 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범죄 예방과 억제는 어렵다. 정부가 할 역할은 이들을 엮고 지원해주는 일이다. 역대 정부가 행했던 각종 범죄대책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소했다”는 점이다. 용두사미가 된 셈이다. <능엄경>에 ‘지월(指月)’이란 말이 나온다. “달을 가리킨다.”는 의미다. 손으로 달을 가리킨다면 당연히 달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봤기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범죄문제 해결에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 정부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PSI](#)



여성대상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김 학 신



개 관

경찰은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범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역량에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해를 범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범죄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고 있다.

정부도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죄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사회악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뽑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11년 기준, 한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1,912건으로 2010년 20,375건 대비 약 7.5%인 1,537건이나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로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극악하고 잔혹한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아동범죄 특히, 아동 납치 및 실종, 살해, 아동대상 성범죄 등에 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아동보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

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의 아동보호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 경남 통영의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은 모든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에서 범죄 취약계층들이 받는 고통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으로 출석하여 중복조사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여성경찰관 및 진술 녹화를 활용하여 2차 피해와 아동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조사시에 속기사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녹취록 작성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편의적 조서작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자를 배려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심리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 확대

201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진술녹화 의무를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전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ONE-STOP 지원센터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여성 및 아동, 장애인 등의 상담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아동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윈스톱 지원센터를 처음 경찰병원에 개소한 이후, 현재 전국에 2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성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여 성폭력 범죄, 성매매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률구조공단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윈스톱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시 변호사가 참여,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윈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12,72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28,240건, 진료 12,528건, 증거채취 3,641건, 진술녹화 4,201건, 피해자조서 작성 7,674건을 처리하였다.

2013년에도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22개의 지원센터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행정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각 부처가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이 제도는 확고히 정착이 될 것이며, 그 결과 2013년은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2012년 보다는 한

발 더 앞서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 역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및 아동, 장애인 실종 등 시스템의 확대

2008년 ‘실종아동등’의 신고는 14세 미만 아동이 9,470명에서 1명, 2009년도는 9,257명에서 18명, 2010년에는 10,872명에서 50명, 2011년에는 11,425명에서 80명이 미발견되었다.

매년 미발견 실종아동 등의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신고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으로’ 실종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보망과 연계하였으며,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아동등사전등록제, 개인위치정보시스템구축 운영,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실종예방과 찾기 업무를 개선하였다.

이처럼 실종된 여성 및 아동, 장애인 발견을 위해 우리 경찰은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전자 검사 및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도입하여 아동의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 공공기관, 신문사, 이동통신 등 73개 기관과의 협약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로 2007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08건의 경보를 발령하고 총 256명을 발견하였다.

2013년에는 여성·아동 및 장애인 등의 실종에 따른 경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과의 추가적인 협약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종아동 찾기, 업무용 휴대폰 조회기를 통한 조회시스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실종자 등 신원확인 종합관리시

스템(P4M-Police for Missing Person은 경찰·보건복지부 등에 있는 실종 관련 자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 휴대용 신원확인장비 등을 활성화한다면, 여성 및 아동의 실종 사건이 소폭으로 증가하더라도 실종경보시스템, 유전검사, P4M 등 모든 시스템들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게 실종된 여성 및 아동, 장애인 등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 대상 범죄의 적극적 조치

2007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은 놀이터 및 통학로 등에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지킴이집과 아동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아동지킴이집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으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3년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확대와 더불어 아동안전수호천사 내실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이 따라준다면, 2012년 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충분히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아동실종 문제 및 비행,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2011년 아동 성(性)범죄 판결의 경우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은 217건 중 94건(4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장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주장한 결과 2012. 12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모두 폐지하였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적용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어느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선임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kkangssyy@nate.com

청소년범죄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분석과 자기통제이론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이완희

서론

경찰청(2012)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범죄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는 점점 흉악해지고 범죄의 최고점(peak age)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발전범죄학자들은 종단연구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다이내믹하고 예측하기 힘든 청소년기의 범죄발달 유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이용하여 예측하기 힘든 청소년기의 범죄발달궤적을 분석하고 변화유형별로 잠재성장모델(LGM)을 적용하여 각각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조사 방법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등패널 1~5차년도 자료(2003~2007)를 사용하여 청소년 범죄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범죄는 13개의 범죄행동을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0에서 3(0=non-offense, 1=minor/status offense, 2=moderate offense, 3=serious offense)으로 코딩하였다(Ayers et al., 199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발달궤적은 크게 4가지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별로 잠재성장모델(LGM)을 적용하여 독립변수인 시불변수(Time-invariant variable)는 성별, 가족소득, 모친의 고용여부가 각각의 발달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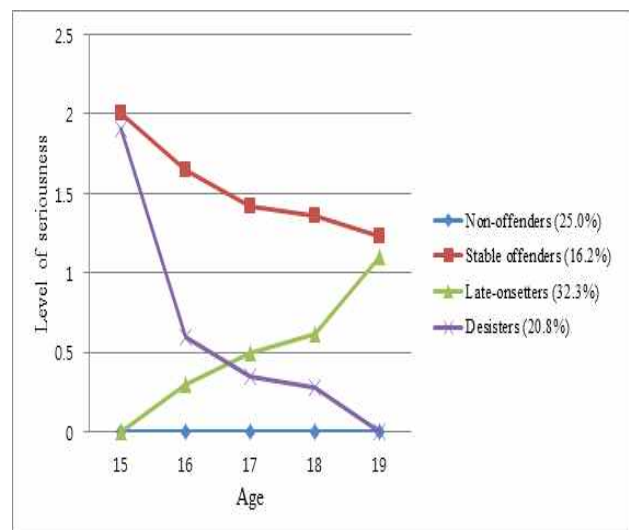
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시변변수(time-variant variable)인 부모통제와 낮은 자기통제력을 추가하여 각각의 발달궤적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청소년들의 범죄변화유형은 Loeber, et al.(1991)의 dynamic classification 방법을 사용하여 <표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다.

비행상승집단(late-onsetters)은 한국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범죄발달궤적으로 32.3%(n=596)로 나타났다. 무비행집단(non-offenders)은 두번째로 25.0%(n=459), 비행급감집단(desisters)은 20.8%(n=383), 마지막으로 비행지속집단(stable offenders)은 16.2%(n=305)로 나타났다.

<표1> 한국청소년들의 범죄변화유형 (15~19세)



무비행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발달궤적 유형은 각각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자기통제이론을 테스트하였다. 우선 각각의 범죄발달궤적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행지속집단의 범죄발달궤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기통제력(1~5차년도 $r=.367$, $p<.05$)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상승집단의 범죄발달궤적은 2차년도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1~5차년도 $r=.365$, $p<.05$)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급감집단은 범죄발달궤적이 1차년도 이후 급감하여 5차년도에는 범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1~5차년도, $r=.400$, $p<.05$)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비행지속집단은 범죄발달궤적에 따라 시변변수인 자기통제력(1~5차년도 standardized β $-.125 \sim -.217$, $p < .05$)의 변화에 따라 범죄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통제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상승집단은 자기통제력(2~5차년도 standardized β $-.144 \sim -.155$, $p < .05$)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통제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행급감집단은 자기통제력(1~4차년도 standardized β $.097 \sim .122$, $p < .05$)의 변화에 따라 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통제(1~4차년도 standardized β $.059 \sim .112$, $p < .05$)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발달궤적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변화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Moffitt, 1993; Patterson et al., 1992;

Ayers et al., 1999; Chung, et al., 2002, Loeber, et al., 1991)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발달궤적은 비행지속집단으로 범죄발달궤적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심각성은 1에서 2사이로 꾸준히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상승집단은 15세 이후 꾸준히 범죄발달궤적이 상승하였지만 19세 까지 범죄심각성은 대부분이 술, 담배, 가출, 성관계, 무단결석등 지위범죄에 그쳐 고등학교졸업 이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ottfredson과 Hirschi(1990) 일반적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통제에의해서 8~10세에 자기통제력이 형성되며 이것은 일생동안 변함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relatively stable)이거나 자기통제력이 조금씩 상승하지만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비행상승집단은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급감집단은 부모의통제가 상승하면서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를 중단하는 발달궤적에 부모의 역할이 자기통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yers et al.(1991)의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비행급감집단일수록 부모하고의 유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의 통제가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통계분석의 발전과 종단연구자료의 증가로 인해 범죄발달궤적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횡단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과는 달리, 종단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범죄발달궤적을 탐색하여 각각의 변화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변화유형에 맞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PSI](#)

가정폭력 대응, 지금 현장에서는...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순경 김 세 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할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게다가 지금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는 이 곳은 벌써 몇 번째 나갔던 곳인지 모른다.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자녀들의 이름까지 외울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가해자인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 집안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립치한 행동까지 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시는 동안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시키려고 해보지만 아이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하기라도 한 듯 침착해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내가 소속된 관할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출동을 나가서 부부싸움 도중 칼로 자해하려고 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아주머니를 겨우 붙잡아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다. 심지어 부모의 지속된 싸움으로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어린아이들, 명절에도 남편이나 부인을 때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과거 부부싸움에는 경찰의 개입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범죄행태에 대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

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줄이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 척결과 결부시켜 가능지구대에서는 전진호대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우리 관내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대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행 중이다.

그 중 하나로 가정폭력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정에 신고가 있을 때만 출동해서 현장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사(1366센터)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의견을 들어보며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를 설명해주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범하는 학생들 중 주로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을 감안, 상담 시 자녀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분명한 범죄행위이고, 그 특성상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2차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 및 폭력의 대물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생각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의 부부라는 특성상 사건직후 분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사건처리가 매우 유동적이고 감정적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범죄피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이어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4대 사회악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4대악으로 규정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그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소한 다툼이 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SI](#)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원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kkangssyy@nate.com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kkangssyy@nate.com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식품안전을 위한 “경찰의 약속”

경찰청 수사국(국장 최현락)은 4월 22일부터 형사들의 현장활동 소식지인 「형사의 약속」을 매주 월요일 발간한다. 담당자인 수사기획과 박원식 경감은 “형사의 범인 검거 활동상과 각종 정책·정보 등을 소개뿐만 아니라 현장의 주요시책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1호에서는 식품안전을 위해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형사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가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가짜 갈비 제조·유통업자, 중국산 건새우를 국내산으로 유통한 업자, 유통기한 지난 수입고기를 재가공한 업자 등을 검거한 4명의 형사를 ‘금주의 4대 천왕’으로 선정·소개하였다.

한편, 일선에서는 옥천경찰서(서장 김충환)가 4월 18일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단속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단속 매뉴얼에는 불량식품 식별요령,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례, 원산지 표시제 문답자료, 불량식품 단속 관련 지침, 주요 수사사례, 주요 방송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식품안전 4대 천왕	
 경기과주 경감 최광엽	중국산 다진 양념으로 가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검거 무허가로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혼합, 고춧가루 2만kg 1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함바식당’ 등에 판매한 피의자 7명 검거
 경남진해 경위 백승천	중국산 건새우를 국내산으로 유통한 피의자 검거 중국산 건새우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속칭 ‘포장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경매장·도매상에 유통한 피의자 3명 검거
 부산 사하 경사 강승환	유통기한 지난 수입 항정살 재가공한 일당 검거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돼지고기 23톤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한 축산물 포장업체 및 중간 유통업자 등 5명 검거
 인천연수 경감 이형길	가짜 갈비 가공·유통·판매업자 10명 검거 돼지·소뼈에 식용접착제로 수입산 돼지목살, 미국산 살치살을 붙여 만든 가짜갈비 8.6톤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축산물가공·유통·판매업자 10명 검거



옥천서 이민우 수사과장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요령, 수사기법이 부족했었는데, 이번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부정식품 단속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SI**

(정리: 선임연구관 강소영)

서울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쟁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노성훈

연구의 배경

1999년 한국경찰은 오랫동안 잔존해 있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탈피하기 하고 서비스 중심적인 경찰로 변모하기 위해 ‘경찰대개혁’을 단행했다. 개혁플랜 속에는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파트너십 통해 범죄와 무질서 해결을 추구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적인 가치는 범죄율 감소와 같은 정량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같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보다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실시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인과관계를 다양한 경쟁가설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한국사회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론과 연구모형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네 가지의 모형에 의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직접영향 모형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주민과 경찰 간의 접촉의 빈번해질수록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보순찰, 자전거순찰, 방문활동, 뉴스레터, 지역파출소 운영 등은 주로 경찰과 주민

간의 접촉을 늘리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

지역사회 내의 무질서를 감소시키면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 수 있다. 빈집, 쓰레기더미, 낙서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와 공공장소 음주행위, 고성방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발생의 전조증상으로 받아들여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깨어진 유리창이론’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욕시와 뉴와크시에서 실시된 경찰의 무질서단속활동이 범죄율과 더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한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사회 통합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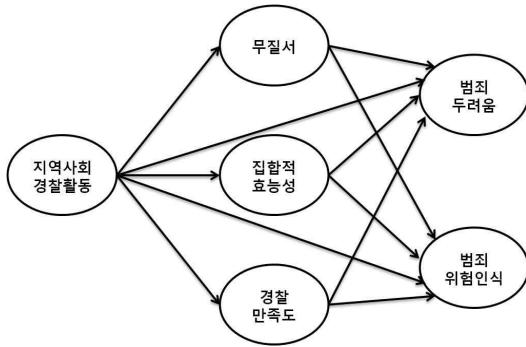
범죄유발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한다. 지역주민 회의, 주민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상호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 즉 ‘집합적 효능성’을 높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시킨다.

경찰에 대한 만족도 모형

경찰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주민들이 인식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사회의 필요와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과관계 가설 모형



연구결과

2003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네 가지 모형에서 도출한 연구가설 모두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사회 무질서모형의 경우 서울시민도 무질서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질서 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집합적효능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증가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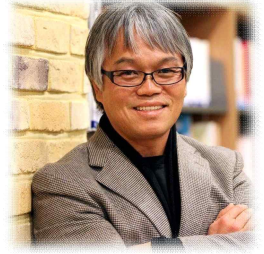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효과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최

초 도입 시부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아젠다로 삼지 않았다. 경찰대개혁의 주요 목표가 일제 강점기와 권위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본질보다는 외형을 중시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이다. 이미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범죄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온 미국과 달리 한국은 1997년부터 시작된 IMF 금융위기와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범죄가 주요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요소가 약하다. 미국에서 범죄문제는 마약, 총기와 결부되어 도심에 위치한 가난한 소수민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 부분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공간의 프레임 속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몇몇 잔혹한 강력범죄와 연계되어서 사례중심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사회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행’ 등과 같은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높아졌다. 그 동안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율 감소와 검거율 증가에만 집중된 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나타내는 치안정책의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이다. 이에 향후 경찰활동을 포함한 치안대책은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PSI](#)

국민과 함께하는 실종수사



화성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위 정 일 수

실종수사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종적이 없고 간 곳을 알 길이 없는 실종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활동을 말한다. 그와 더불어 집을 나간 가출인,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미귀가자들에 대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 잃고 헤매는 미아나 정황상으로 보아 자살할 것 같은 자살의심자에 대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수색을 실시하고, 범죄와 관련된 행불자 수사 등에 대한 경찰활동을 일컫는다.

실종수사는 형사과 실종팀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과, 여청과, 생안과, 경비과 등 경찰서 총력대응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수사와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와 수색은 엄연히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수사는 형사과에서, 수색은 여청과에서 주관한다. 실종자 동선을 따라서 CCTV를 확인하고, 친구나 관계자 등에 대한 탐문을 실시하고, 행적을 추적하는 수사와 여기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좁혀진 동선을 따라 용의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다. 수사와 수색이 협업되므로 실종자 소재발견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한 곳에서 여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나를 하는 것이다. 팀플레이이다.

경찰활동 중에 실종자를 찾아주는 활동은 없었다. 신고자를 상대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되면 수사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다려 보라 했다. 실종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경찰이 관여했다. 시체로 발견될 때 경찰의 수사는 개시됐

다. 죽어야 시작되는 경찰활동이었다. 살아있는 실종자를 찾는다는 건 있지 않았다. 물론 납치, 인질범 수사는 있었다. 납치되거나 인질로 잡혀 있거나 시체로 발견되어야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도 옥먹었다. 실패다.

소방이 본연의 임무인 화재진압을 잘해서 인기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119구급대 덕이다. 재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듯 경찰에서 실종은 가출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시켜 찾아주는 것이다. 항상 연결되어야 할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참 답답한 일이다. 가끔씩 소방, 지자체나 가족부와 같은 데에서 하지 왜 경찰이 하나며 불멘소리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불 켜 놓은 곳이 경찰 아니면 어느 부처도 없는데, 그럼 경찰이 하지 않으면 국민은 누구에게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물론 소방도 24시간 근무체제이나 근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지금 소방은 위치추적권을 활용하여 수색에 대해선 더 적극적일 때가 많다.

아이가,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 그 순간 가족의 머릿속은 하얀 백지가 된다. 어느 누구도 그렇다. 같이 근무하는 경찰동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간신히 떠오르는 게 경찰이다. 112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범죄와 관련 없으니 며칠 기다려 보라면, 범죄와 관련이 없어 수사 못한다면, 범죄가 되어야 수사를 개시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이놈의 경찰들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변을 당해야

나설꺼냐. 내 자식 죽고 난 다음에 범인 잡으면 뭘 할꺼냐”고 따져 물으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과거 보험회사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보험 들면 다 해준다 해놓고, 막상 사고 나서 보험금 타러 가면 이것 빼고, 저것 제하고 하면 안 된다(지금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주변인들이 겪은 일일뿐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경찰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다). 실종자를 찾아준다고 홍보 해 놓고 13세 이하만 찾아주고, 여자니까 신경 쓰고, 남자면 기다리라면 홍보는 왜 했냐는 것이다. 나가면 찾는다. 연락두절 되면 이어준다. 이것이다. 생명과 재산, 신체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다.

실종자 수사나 수색은 찾을 목적에 집중하면 안 된다. 수색을 하는 과정, 수사를 하는 과정을 메뉴얼화 하여 빈틈없이 활동하는 것이다. 찾자면 못 찾는 것이다. 찾으려고 그 과정을 밟을 때 찾아지는 것이다. 가을 수확에 대한 봄의 파종과 같다. 소재 발견이라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찾는 과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진행하는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해서 자연히 찾아지는 것이다. 찾기 위함의 면피용 수색이나 수사는 책임을 못 면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매뉴얼대로 했을 때 책임은 면해지는 것이다. 국민이 흡족해 하면 당장 소재발견의 결과가 없어도 책임을 안 묻는다. 당장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신고한 보호자가 잘 안다.

수색의 방법도 경찰이 일일이 수색하는 방법이면 틀린 것이다. 영화를 보면 공비를 토벌하는 군인들에게 나무꾼이 혈떡이며 뛰어와 “고..공비..!” 라며 공비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을 기억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군인이 공비 토벌한다고 수색해야

공비 찾기 힘들고, 경찰이 실종자 수색한대야 실종자를 찾기는 힘들다.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지역단체들을 동원시키지 않고는 찾을 수 없다. 사냥터를 나가면 사냥하는 사람 수 보다 몰이꾼의 숫자가 훨씬 많다. 산을 온통 들쭉시는 것이다. 그래야 풀숲에 숨은 노루가 쫓는다. 그 방법이다. 가출한 아이 한명을, 길 잃은 치매 노인 한분을 찾기 위해서, 자살자 한명을 구하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경찰서 관내 전체가 들쭉여야 한다. 지역 전체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경찰만으로 하는 수색은 보여주기식, 면피식 수색이다. 못 찾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과 같다. 인간은 사회화하여야 한다. ‘사람 인(人)’자와 같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이다. 사람인 개인은 사람이지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듯이 경찰과 국민의 관계가 경찰이다. 국민 없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찰은 경찰이지만 아니다. 그냥 경찰제복 걸치고 있는 것이다.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는 경찰만이 한다. 범죄와 경찰과의 관계만 있지 국민은 제외된다. 실종자 수색이나 수사는 범죄와 연결되기 전, 신고자인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과정을 공개하고, 수색과 수사에 참여시키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 과정에 국민도, 실종자도, 경찰도 존재감 있다.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에 의한 경찰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해야 경찰이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다른 지역과 치안정서가 같지 않다. 보편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다. 살인의 추억이 있기에 특수한 지역이다. 범죄 우려가 없을 땐 평범한 지역이나 범죄와 관련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순간, 경찰에 대한 반

응이 유별난 지역이다. 불안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증폭되기에 반응이 남다르다.

수색과 수사에 신고자를 참여 시키고, 함께 한다. 민기대나 자율소방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한다. 타격대를 동원하고 기동대를 지원받는다. 주변 순찰차들도 수색에 동원되고 실종팀 아동여성계 직원들이 직장한다. 형사기동대도 물론 동원된다. 이것도 부족해서 경찰 수색견도 도입키 위해 실종수사팀 중에서 경찰견 핸들러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개활지나 야산, 해변 수색을 위한 헬리캠(무인항공촬영장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특수한 지역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이다.

실종수사팀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아직 인식 부족이다. 경찰청에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 새로운 제도이기에 일선에서 기준을 만들면 된다. 나의 업무 영역이 50이면 100의 일을 할 때 나의 주체성이 확보된다. 업무 영역은 50임에도 나의 영역을 30으로 줄여 놓으면 100을 시킨다. 시키는 일을 할 때는 수색에 당하거나 수사에 당한다. 피해를 당한다. 종속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지역에 맞는 실종수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수사와 수색을 함으로써 국민과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각 경찰서별로 특성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면 경찰청에서는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장점은 전파하고, 단점은 보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제도는 발전되는 것이다. ‘사고 치면 잡는다. 집 나가면 찾는다’는 경찰수사의 그리고 실종수사의 모토가 확립되는 것이다. [PSI](#)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경찰관 중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전쟁위협공세의 배경과 대응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유동열



가속화 되는 북한의 전쟁공세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2012.12.12) 발사와 제3차 핵실험(2013.2.12)을 전격 강행하였다. 이에 3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당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협정의 전면폐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의 차단, 전면대결전 최후단계” 등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1호 전투근무대세 진입 선포’(3.26), 남북 군통신선 차단(3.27), 영변 원자로 재가동(4.2), 개성공단 차단(4.3),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장(4.16) 등을 통해 예고 없는 무차별적인 보복행동 개시와 조국통일대전(적화통일) 성취를 협박하여 연일 전쟁위협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쟁공세의 배경

최근 북한의 전쟁위협 공세의 저의와 목적을 살펴 보기에 앞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로켓포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 배경은 핵개발이 선대 수령인 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기 때문이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은 이른바 수령후계자론에 의해 조선혁명전통의 유일한 계승자고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자라는 덕목을 갖추었다는 자기들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핵개발과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유훈을 여기게 되면 그렇

지 않아도 취약한 권력(김정은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이나, 권력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이 불안정하게 되고 ‘혁명의 배신자’로 몰려 조기 축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김정은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도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것은 이른바 ‘유훈사업과 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는바, 김정은은 선대수령의 유훈관철과 자주권 수호를 위해 대남, 대외 강경노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대남군사위협의 저의

최근 북한의 대남전쟁위협 공세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기본적으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며 당면해서는 대내, 대남, 대외적 측면의 다목적 카드라고 판단된다.

첫째,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을 과시하여 정권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수작이다. 2012년 이른바 4월 행사(제4차 당대표자회,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출생 100주년 행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한 김정은정권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김정은 으로서는 장거리로켓발사, 핵실험 및 대남군사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유도하고 전쟁분위기 고조 등을 통해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권력의 3대 기둥인 당·정·군을 확고히 장악하여 김

정은정권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체제 및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남측면에서는 우리 내부에 핵위협과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사회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친북화 압력과 정권기반 무력화 의도로 엿보인다.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전쟁협박공세에 발맞추어 일부 정치세력과 종북좌파 세력들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기와 햇볕정책으로의 전환, 무조건적인 남북대화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세력은 핵전쟁을 협박하는 북한을 나무라기는 커녕 새정부에게 친북화를 압박하며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전쟁이나 평화냐의 이분법으로 굴종된 평화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며,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셋째, 대외적 측면에서는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에 저항하며 북한이 초강경책인 한반도 전쟁카드를 내밀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역설적으로 호전적인 북한을 달래는 대화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젊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우리의 대응

첫째, 국민과 정부가 단합하여 결연한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에도 북한은 대남심리전의 최고 단계인 핵전쟁협박 공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으니,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이른바 이성적 대응을 주문할 것이다. 북한의 핵전쟁공세에 이성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은 “전쟁이나 평화냐”의 공갈공세에 ‘북한 눈치보기’, ‘북한 자극하지 않기’, ‘북한 비위맞추기’와 ‘북한 퍼주기’로 대응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인류문명사에서 평화를 구걸해서 안정적인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평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이며 국가과괴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철저한 안보차원의 자주적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대북응징책을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포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이 대책’만 가지고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도발의 유혹을 갖게 할 것이다. 강력한 응징만이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북한 김정은정권을 고립화 시켜 붕괴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3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인 김씨집단이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나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결은 난망하다. 김씨집단의 붕괴만이 핵실험 문제 등 한반도 전쟁위협, 북한인권, 국내 종북세력 등의 만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방법이다. [PSI](#)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자동인식시스템 전문가조사단 활동기

치안정책연구소 교통대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 남 선



2013년 2월 눈 많은 겨울 어느날, 연구실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여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입니다. 엘살바도르 추진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가조사단으로 현지 파견을 부탁드립니다.’ 다급한 일정에 급히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협의, 출장결제, 비자발급 등 10여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을 출발한지 20여 시간 만에 미국 달라스를 경유하여 엘살바도르에 도착하였다. 엘살바도르는 공항에서부터 여느 도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무장한 현지경찰관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전문가조사단 일행 4명은 이들의 경호아래 곧바로 경찰 SUV 2대에 나누어 타고 산살바도르 시내에 위치한 숙소로 향했다. 이렇게 시작한 10일간의 여정은 나의 삶에 있어 아주 특별하고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시간을 거스르며 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 ‘이 나라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나의 제안으로 업무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하여 현지역사관광 일정을 잡았다. 특히 함께 일정을 보내다가 뒤늦게 대화를 시작한 MARGO FITZGERALD 등 미국 FBI 경찰관 3명과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Washington, D.C., Los Angeles, South Portland에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며 중미의 경찰관 연수프로그램에 교관으로 파견되었다. 중미 6개국의 경찰관들이 엘살바도르에 모여서 미국 FBI 교육진에 의해 선진 경찰기술을 연수받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과목은 체포술, 사격술,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5주 정도 된다고 한다.

‘만난 김에 기회다’ 싶어, 우리 연구소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경찰의 경찰장비 관련 연구조직과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일행 중 한명이 FBI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근무당시 별도의 전문연구부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매년 200억 원 가량의 순수연구예산(인건비 제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본연구의 결과물이 Pilot System 이나 본격적인 장비개발로 이어질 경우, 입찰을 통해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진행된다고 한다.

조사단 일행은 2월 17(일) 17:00시 KOICA 사무실에서 ‘조사단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까지의 여유 시간 없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엘살바도르 경찰청 방문협의 및 911 센터시스템 실태조사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필자)



전문가조사단이 엘살바도르에 파견된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열악한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산살바도르시의 ‘차량자동인식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의 현지의 치안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했는데, 파악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엘살바도르는 지리적으로 중미지역 항공의 중심지이며 육로를 통한 인접국가와의 이동이 자유로움. 치안특성은 범죄조직이 대형화되어 있으며 2개의 대형범죄조직이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범죄조직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국제범죄와 민생범죄가 혼합되어있는 양상으로 치안상태는 매우 열악함.

○ 엘살바도르의 치안상황은 2012년 기준으로 49,201건이 발생하여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가 매우 높으며, 이 중 살인 2,578건, 강도 5,521건, 강간 394건, 납치 3건 등 강력사건이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한해 994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평균 범죄발생추세는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시스템 설치 대상도시인 산살바도르의 치안상황은 2012년 범죄발생건수가 3,402건이며 이 중, 살인 257건, 강도 613건, 강간 28건, 납치 1건으로 강력사건 발생비율이 26.4%로 전국 평균 보다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108명으로 다른 도시의 평균인 71명 보다 34%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과속단속 등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단속활동이 필요한 상황임.

위와 같이 파악된 엘살바도르의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일간에 걸쳐 산살바도르 전 지역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다각도의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가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살바도르에서 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치안의 중요성이다. 대부분의 상점과 주유소, 아파트, 주택가 골목길 등에는 무장경비원을 고용하여 경비를 서고 있다.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행인보다 경비원이 많이 보일 지경이다.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자가치안에 나선 것이다. 또한 해가 지면 위험해서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치안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해외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직접적인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생산성 감소효과를 유발하여 경쟁력 약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부문도 우리와 다른 점들이 많은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차량우선, 소통우선으로 운영되고 도시부에는 횡단보도 대신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결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육교는 보행수요 만큼 설치하기 힘들고 횡단보도가 부족하니 무단횡단이 난무하게 된다. 또한 차량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도로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교통표지가 거의 없어 제한속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치사율을 증가시키고, 특히 가로등이 없는 지방부도로에서는 야간 교통사고시 뺑소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끝으로, 이번 활동이 엘살바도르 치안문제 해결과 교통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 사이에 더 활발한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PSI](#)

사업명	국문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자동인식시스템 구축 사업		
	영문	Project of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System for Security Improvement in El Salvador		
국명	엘살바도르	분야	행정제도(정부역량강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차량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치안강화 및 범죄율 감소 • 과속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율 감소 및 교통안전성 개선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자동인식시스템 현장 시스템 21개소, 센터 시스템 1개소 설치 • 차량자동인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이전 			
사업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주요통과지점, San Salvador 주변 출입지점, San Salvador 시내부 주요지점 등 El Salvador내 주요 교통지점 			
사업규모/기간	\$3,657,000/3년(2014년~2016년)			
기대효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차량 및 교통 관련 치안시스템 및 관련 기술 보급 		
	엘살바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 차량 및 범법 관련 차량의 단속을 통한 치안 강화 및 범죄율 감소 • 과속단속을 통한 교통사고율 감소 및 교통안전성 개선 • 유지보수 기술이전을 통한 IT 기술 수준 제고 		
시행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관리단(PMC)		
	엘살바도르	국립경찰청(PNC), 치안법무부(MJSP), 중미기술원(ITCA-FEPADE), 교육부		

연구소 소식

◆ 연구소는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해 4월 17일 한국법정책학회(회장 강동욱) 및 4월 23일 행복발전소(대표 송길원 목사)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법정책학회 학술교류협정 체결>



<행복발전소 학술교류협정 체결>

◆ 연구소는 4월 25일 2013년도 용역연구과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연구과제 12건, 자유연구과제 5건을 선정하였다.

<자유연구과제선정결과>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1	4대약 범죄에 대한 상황통제기법 적용 및 효과성 분석	윤 우 석 (계명대)
2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 상 운 (대구 가톨릭대)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 양 현 (영동대)
4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연구	윤 옥 경 (경기대)
5	사회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한 경찰의 대응 전략에 관한 학제간 연구	장 문 철 (경찰대)

<지정연구과제 선정결과>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1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대학 미래 발전 방안 연구	이 상 원 (용인대)
2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급별 관서운영경비 적정성 검토	최 상 옥 (고려대)
3	편의점 방범인증제 실시에 따른 효과 분석	이 윤 호 (동국대)
4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 정 민 (단국대)
5	용역폭력 방지를 위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범위 연구	김 원 중 (청주대)
6	「각국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비교·관찰을 통한」 한국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 신 교 (김천대)
7	과학수사요원 근무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조 현 빈 (순천향대)
8	집회 해산명령의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백 창 현 (경찰대)
9	경찰대학생 통합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축 연구	이 주 희 (동신대)
10	인터폴 공조수사에 관한 법체계 정비 방안	안 영 훈 (지방행정연구원)
11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 방안 연구	김 재 윤 (전남대)
12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 조항 개선 방안 연구	박 형 식 (충부대)

◆ 연구소는 매주 월요일 연구과제에 대한 전체 연구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4월 8일에는 문찬식 연구관이 인도네시아의 경찰과 대테러진압부대 소개, 4월 15일에는 교통대책연구실 김남선 연구관이 엘살바도르 치안 강화를 위한 차량자동인식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연구소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4월 5일에 제174기 경감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백병성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2013 춘계학술대회: 2013. 4. 26)에서 “경찰민원서비스의 윈스톱처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김용민 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은 4월 10일 경찰대학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위기관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3월 11일 통일부에서 정부부처 통일기획요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특강하였다. 3월 27일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응’이란 주제로 안보특강을 하였다. 또한 3월 20일 MBC-TV 뉴스특보(생방송)에 출연하여 ‘3.20 사이버공격 사건’에 대한 진단을 하였고, 3월말에서 4월말까지 KBS-TV, 채널A, TV조선, JTBC 등에 6회 출연하여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대담하였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3월 15일자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3월 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ISCR 의제선정간담회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석, 4월 30일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최 ‘새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월 29일자로 형사소송법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경찰형사법 과정에서 수사형사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2013년 4월 4일 KTV (한국정책방송) ‘집중조명’에 패널로 출연하여 ‘3대악 척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연구소 인사

<취임>

◆ 4월 16일(화) 제6대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최경식 경무관이 취임하였다. 신임 최경식 소장은 경기 부천 남부경찰서장, 서울 도봉경찰서장, 서울청 경무과장, 경남청 차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김순경에게 물어보세요(1992)」, 「경찰서장론(2011)」, 「순라꾼(2011)」 및 다수의 경찰실무관련서 등이 있다.

<전출·입>

◆ 4월 17일 문찬식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이 업무지원을 마치고 인천청으로 전출하였다. ◆ 4월 19일 경사 김형석(연구소장 부속실), 4월 22일 총경 서대용(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이 전입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주요 언론보도

조선일보, 2013년 3월 8일 A10면, 「힘은 넘치는데 소외감... 육하는 노인 늘다」

쉽게 흥분하는 노인, 감정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르는 '폭주노인(暴走老人)'이 우리 사회 안에 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 인구비(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는 2001년 1076명에서 2010년 1923명으로 78%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인구비가 낮아진 것과는 정반대의 추세다."라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SBS·연합뉴스, 2013년 3월 10일, 「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 다시 범행한다」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가운데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는 치안정책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보도했다. SBS와 연합뉴스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상당수가 무동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대 약화, 경제적 좌절, 사회적 불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치안정책연구소 김지환 연구관의 분석을 보도했다.



KBS, 2013년 3월 16일, 「KBS 뉴스광장」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자신들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접속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을 지목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서 KBS는 "북한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 해킹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이를 동안 마비시켜 왔다는 것은 자작극으로 본다"라는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의 분석을 보도했다.



SBS, 2013년 4월 2일 현장21 96회,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SBS는 치안정책연구소 이기수 경찰연구관의 당시 사건에 대한 분석을 다뤘다.



연번	보도 내용	일자
1	[채널A 종합뉴스] 전국 아우르는 기업형 절도로 스마트폰 20억 어치 밀수출	2013-04-30
2	[문화일보] 개성공단, 재가동? 군사기지화?...北 선택은	2013-04-29
3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북한 스파이의 모든 것	2013-04-02
4	[TV 조선] 전단지 살포·탈북 인사 협박...누구 소행인가?	2013-04-21
5	[채널 A] 40대 주부에 정보망 뚫렸다...남과 간첩의 실체는?	2013-04-20
6	[TV조선] 한국, 北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2013-04-16
7	[TV조선] 우리 정부는 무대응...방북 요청 분수령	2013-04-16
8	[TV조선] 누가 왜 보스턴 마라톤 노렸나...미국은 계엄령	2013-04-16
9	[문화일보] 적반하장 北 “南, 대화 원하면 사죄부터 해라”	2013-04-16
10	[CBS 노컷뉴스] 北 경고..."남한 내 외국인 대피하라"	2013-04-09
11	[문화일보] 김정은, 국제신용 실추보다 체제강화 우선	2013-04-09
12	[MBC 뉴스데스크] 저팔계 김정은 사진 그대로...이례적 유지 보복 구실?	2013-04-08
13	[TV조선 토요일뉴스] [집중 취재] 대남선전 사이트의 실체는?	2013-04-06
14	[조선일보] 안보당국 "신원노출된 從北인사들, 北 주장 피나른 흔적 삭제나서"	2013-04-06
15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긴급진단! 위기의 한반도	2013-04-05
16	[문화일보] 北 한달째 ‘위협戰’... 김정은 리더십 과시로 ‘체제안정’ 겨냥	2013-04-04
17	[문화일보] ‘核공격 타깃은 南’... 北, 법으로 명시	2013-04-03
18	[SBS 현장21]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2013-04-02
19	[문화일보] 김정은, 경제 내각상 전면교체... 전쟁위기 고조속 경제살리기?	2013-04-02
20	[조선일보] 北 경제개혁의 기수 박봉주, 6년만에 내각 총리로 컴백	2013-04-02
21	[조선일보] 北 "핵은 국보"...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	2013-04-01
22	[TV조선] [북한 사이드스토리] 북한의 대남도발 변천사	2013-03-31
23	[JTBC] [탐사코드] 중국 현지 취재, 북한 해커의 실체를 파헤친다!	2013-03-29
24	[국민일보] 빛 갠아주고 직장 구해준 탈북청년, 새 환경 못건디고 다시 거리 떠돌아	2013-03-29
25	[한국일보] 굳건한 군사동맹 과시... 북한 도발 억제력 한층 강화	2013-03-25
26	[서울신문] 北 정찰총국 사이버요원 이달 초 中 등에 급파	2013-03-23
27	[MBC 뉴스데스크] "北 전문 해킹부대만이 할 수 있다"...수법 일치 의심	2013-03-21
28	[한국경제] 靑 "해킹, 北 소행 가능성"...軍 "사이버戰 인력 1000명 이상으로 확대	2013-03-21
29	[동아일보] 北, 영재들 모아 사이버공작원 3000여명 양성	2013-03-21
30	[조선일보] [3·20 사이버 테러] 천안함 때처럼... 韓美훈련 막바지에 터진 해킹테러	2013-03-21
31	[MBC 뉴스특보] 금융전산망도 한때 마비..해킹 가능성	2013-03-20
32	[KBS 뉴스광장] 北 “사이버공격은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	2013-03-16
33	[TV 조선] 北 노동신문 해킹은 자작극?...역공격 가능성	2013-03-15
34	[MBC 뉴스데스크] 북한 해킹 자작극 가능성..보복 도발 감행?	2013-03-15
35	[세계일보] 인사동 방화범처럼...정신이상 범죄자 66%가 재범	2013-03-10
36	[SBS] [연합뉴스] 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 다시 범행한다	2013-03-10
37	[조선일보] 연평도 포격부대 간 김정은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對南 협박	2013-03-09
38	[조선일보] 힘은 넘치는데 소외감... 욕하는 노인 늘다	2013-03-08
39	[조선일보] 北,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 포격을?	2013-03-07
40	[매일경제] `경기불황→서민범죄→사회불괴` 차단 갈뻘	2013-03-07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